

# 단순 피부병 일단 안도 속 “전남 뚫리면 안된다” 초긴장

럼피스킨병 확산 비상...의심증상에 긴박했던 해남 축산농가 가보니

의심신고 접수됐지만 ‘음성’ 다행 “아픈 소만 봐도 가슴 미어지는데 겪어보지 못한 질병 대처 어려워” 전국 최대 축산농가 몰린 전남 확산 방지 위해 집중 방역 안간힘

“럼피스킨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라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아픈 소의 눈을 보면 가슴이 미어져 못 살아요.”

23일 해남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1차 조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나타나 전남 축산 농가들이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최대 소 사육 지역인 전남에서 전염력이 강한 럼피스킨병이 발병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산할 것으로 우려돼 농가들과 지자체는 초비상 상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해남군 현산면의 한 축사에서 럼피스킨병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해남군 등은 사육중인 소의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 증상을 신고한 농가에서 오전 11시 40분께 시료를 채취해 전남동물위생시험소에 시료를 전달했다. 다행히 1차 검사 결과 음성, 곰팡이균 감염 의심 판정이 나왔다.

**?** 럼피스킨병 (Lumpy Skin Disease)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과 사료 등에 의해 전파된다. 이 병에 걸린 소는 고열, 피부 결절(단단한 혹)과 함께 우유 생산량 감소, 유산, 불임 등의 증세를 동반한다. 폐사율이 10% 이하이고 구제역과 달리 공기로 퍼지진 않지만 전파력이 강해 국내에선 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전남 축산 농가들은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재 해당 농가 주변 10km 이내에는 670여농가가 2만 7000마리의 한우·젓소(젓소 4농가 5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해남군 현산면 축산농가는 입구마다 ‘방역 중 접근 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다.

해남에서 200여두의 소를 키우고 있는 최정탁(56)씨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질병이라 대처가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구제역 등 한차례 고초를 겪었던 질병들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지만 전례없는 럼피스킨병은 약 40년간 축산업을 해온 최씨도 처음이라는 것이다.

최씨는 입구에 있는 소독 발판에 소독약을 채우며 “평소보다 소독 횟수를 두 배 세 배 더 늘렸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하루는 소독으로 시작해 소독으



23일 럼피스킨병 의심신고가 접수된 축산농가에 방역 중이러는 팻말이 붙어 있다. (왼쪽) 해남군이 축산농가 밀집지역에서 방역차량을 이용해 소독을 하고 있다.

로 끝난다. 농협 공동방제단이 축사를 돌며 소독에 나서고 있지만 축사 지붕부터 주변까지 직접 소독하기도 한다.

허영조 전국한우협회 해남지부장(64)은 “큰 질병이 돌면 자식같은 소가 생매장당하게 될텐데, 두는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왔든 전쟁으로 사육됐든 인산했는데 럼피스킨병까지 발병해 더욱 힘들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럼피스킨병 의심받았던 인근 농가의 소가 단순 피부병이라는 소식에 다행이라면서 “소는 피부병만 걸려도 상품성이 떨어진다. 피부병도 옮는 질병이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염려했다.



이날 해남군에는 총 6대의 방역차량이 돌아다녔다. 농협 공동방제단이 약 354개 농가를 돌아다니며 소독약을 살포했다. 축사 내부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축사 진입로와 주변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럼피스킨병 의심받는 축사 주변 500m로는 집중 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4년 전 해남 화산면에서 축산업을 시작한 윤기현(56)씨는 “아직까지는 구제역도 겪어보지 못했기에 이번 럼피스킨병이 더욱 걱정된다”며 “애지중지 키워낸 송아지를 질병 때문에 살처분을 해야 하면 가슴이 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남 축사 소독은 단순 피부병이라 한숨을 돌렸지만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던 농가 소독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방역 단계를 최고 수위로 올리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도내 22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소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한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쏟고 관내 소 사육농가(1만 8000가구)에 임상증상이 있는지 전화 여부를 확인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집중 홍보·지도하고 있다.

/해남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조합원 속여 88억 가로챈 지주택 조합장 구속

내 집 마련에 나선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조합원 267명을 속여 88억여원을 가로챈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순천의 지주택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주택 감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순천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주택 조합원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여원을 받아 쟁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주택 신고를 위해 토지사용 승낙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구매를 하지 않고 사업면적의 2.7%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였으나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고 2년 이내 사업승인 실패 시 분담금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재개발 추진성과 없이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0억원을 썼고 은행에 신탁된 나머지 분담금을 인출하기 위해 임시 총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고 조합원을 상대로 84억원 규모의 압류 및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가상선물인 ‘별풍선’ 구매에 수익원을 탐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범죄수익금 몰수보전 등을 위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불법 고리대금업 베트남 유학생 2명 징역형

연 이자율 최고 431% 받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을 변경할 때 통장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악용해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베트남 유학생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유학생 A(22)씨와 B

(2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베트남 출신 외국인들에게 하루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연 이자율 최고 431.3%에 달하는 고리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3만원을 받는 등 총 7명의 베트남 유학생을 상대로 범행했다. A씨 등은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가

짜 잔액 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서류를 제출해 외국인들은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을 변경했다. 이들은 일반연수비자(D-4)로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유학비자(D-2)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 잔액 증명서를 포함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혔고 상당 기간 여러 차례 제한 이자(연 24%)를 초과하는 금전대여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사건 인사이트

## 강제추행 피소 총장 도우려 피해자 음해

‘남자관계 복잡’ 등 소문 퍼뜨린 동료 여교수 등 3명 유죄

“스님이 A교수를 좋아한다.”, “A교수가 이혼을 했고 다른 이혼한 교수와 사는 등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이는 대학 여자교수들이 같은 대학 여교수를 깎아내리기 위해 퍼뜨린 소문이다.

순천의 한 지역대학 기획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B여교수와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C여교수는 지난 2016년 8월 A교수가 이 대학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되자 범행을 공모했다. A교수의 남자관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총장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들은 A씨와 개인적 인연이 없는 등 사실상 무관한 D씨까지 끌어들이었다.

이들은 D씨를 대학 내에 있는 건강복지관 게스트룸에 머물 동안 숙박하도록 하며 A교수의 뒷조사를 하고 음해를 모의했다.

B씨는 D씨에게 지역 고교 교사들의 연락처를 주고 A교수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달라고 까지 했다. 이를 위해 D

씨에게 A씨의 사진, 차량번호, 주거지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모 계획서까지 작성하면서 A교수를 음해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교수와 공범 D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C교수에게는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D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훼손한 피해자의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것이지만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